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안보전략논단

[2025년 7월호]

www.korva.or.kr

■ 발행인: 신상태 ■ 편집인: 이화수 ■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Vol.53(25-7) | 2025. 7. 1.

제대군인의 취업과 유비무환 정신 함양
나태종

새 정부에 제언하는 한국의 외교·안보·통일 전략
박동순

국방 AI 전략 추진에 관한 소고
이태호

제대군인의 취업과 유비무환 정신 함양

나 태 종

(향군 편집·논단위원,
충남대학교 연구교수)



들어가는 말

일반적으로 군인의 길을 고난과 희생의 길이라고 하지만 그 때문에 더욱더 영광되고 보람된 길이기도 하다. 이 순간에도 수 많은 젊은이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젊음과 열정을 바쳐 헌신할 것을 다짐하면서 대한민국의 군인이 되기 위한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직업으로 군인을 선택하여 부대를 관리하면서 교육훈련을 통해 전투력 발휘를 극대화하고 빛나는 전통 계승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는 직업군인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 무한한 충성심으로 솔선하여 어려움에 임할 뿐만 아니라, 자기희생 정신이 여타의 직업 종사자들에 비해 월등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군의 간부들은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와 작전지역의 지형과 기상변화에 따른 제한사항은 물론, 주어진 상황과 여건의 불비 함을 극복하고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역 후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군 경력을 인정받으면서 사회

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

지금까지 국방부와 국가보훈부를 포함한 정부부처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제대군인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고, 개선방안을 적용하여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전체 제대군인의 눈높이와 기대치에는 여전히 미흡하고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준의 머물러 있다.

제대군인의 취업률이 높을 경우,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도 전역 후 사회 구성원이 되었을 때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사기가 올라가고 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취업률이 낮을 경우, 복무하고 있는 간부들의 의욕 저하는 물론, 우수자원의 획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인생 2막을 위한 사전 준비

직업군인은 군 인력 운영 특성상 현 계급에서 상위계급으로 진출하지 못하거나 일정 연령 도달 시 의지와 무관하게 전역해야 된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군인연금의 수혜가 있지만, 군인연금 기간 미충족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중기 복무자는 연금 미수혜로 일상생활은 물론 자녀교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으로 취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 제대군인은 현역 복무 간 전·후방 각급 부대와 격오지 근무 이력이 많으므로 취업을 위한 사전 준비가 매우 부족하다. 사회와 단절된 환경에서 오랜 기간 국가안보에 헌신한 제대군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로 취업에 대한 걱정과 부담을 해소해 주는 것이 최상의 복지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제대군인이 군 복무의 특성과 경험을 살려 취업할 경우, 국가보훈부 산하의 제대군인취업지원센터와 국방전직교육원의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각 군의 취업선발제도를 통해서 비상대비 업무담당자,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학군협약대학 군사학과 및 부사관과 교수, 학군 제휴 특성화고 교사, 일반대학 안보학 교수, 전투지휘훈련단 예비역 교관, 교육훈련 전문평가관, 체력단련장 관리요원, 복지시설 관리장, 군무원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 및 방산업체를 포함한 기업체 등 다양한 기관으로 취업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직위를 지원하더라도 자격요건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소양 및 전문 역량 구비가 요구됨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유비무환은 현역으로 복무 중인 장병들은 물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제대군인이 전지해야 할 마음가짐이다. 전역 이후부터는 본인의 능력과 가능성을 인정받아 발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역 복무 간부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장점을 살려 부단한 자기 개발로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 적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 제대군인은 전직지원교육을 통한 취업 가능 분야 심화학습 및 일정 자격을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한다.

결론 및 제언

경영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하버드대학교의 하워드 스티븐슨 교수는 “지금 걸려 넘어진 그 자리가 당신의 전환점이다. 전환점이란 인생에 있어 하나의 선물이기는 하지만 오래 기다려주지 않는 속성이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의 적극적인 태도와 능동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피력하였다. 제대군인들은 어떠한 위기가 닥치더라도 흔들리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설령 쓰라린 고통이 장기간 이어지더라도 기대와 희망의 끈을 놓으면 아니 되며, 새롭게 시작하는 의지와 용기, 감투 정신 발휘로 성취의 큰 기쁨을 맛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전역 이후 더 안정된 직장에서 출발하기 위해서는 현재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또 다른 기회와 학습의 발판으로 삼아 스스로 끊임없이 임무를 부여하고 실천해야 한다. 취업한 선배들의 알선 직업, 자격증이 본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활용성이 높은 자격증일지라도 취득 여건 불비 시 본인에게 적합한 자격증 취득으로 조기에 선회해야 한다. “검이 짧으면 일보 전진하라”는 말은 현직에 있을 때는 물론, 전역 이후에도 늘 가까이 두고 실천해야 할 덕목이다. “실패하는 사람은 넘어지면 일어나 뒤를 돌아보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넘어지면 일어나 앞을 보고 나아간다”라는 금언처럼 현역복무 간부 및 제대군인들이 부단한 노력으로 좌절과 실패를 극복하고 취업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기를 기원한다.

새 정부에 제언하는 한국의 외교·안보·통일 전략

박 동 순

(향군 논문심사·논단위원,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교수)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 2025년

2025년은 대한민국이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이다. 그러나 우리가 80년 전에 맞이한 광복은 반쪽짜리가 되었다. 즉 35년간 일제의 식민 치하에서 3천만 겨레와 수 많은 독립투사들이 꿈꿔 왔던 광복은 외세에 의해 이내 반쪽짜리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한반도는 자유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미국과 공산사회주의 중심국인 소련의 힘겨루기로 인해 반쪽으로 갈라졌다. 1948년 유엔이 승인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은 소련의 사주와 중국의 지원을 등에 업은 북한의 불법 침략으로 치열한 전쟁을 치렀다. 그래서 올해는 6·25전쟁이 발발한 지 75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당시 대한민국은 우방의 도움을 받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우리는 전쟁의 상흔을 안고 경제발전에 전력하여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가장 짧은 기간 내에 민주화도 이룩하여 세계 속에 우뚝 섰다.

그러나 광복 80년을 맞는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위협 및 새로운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여전히 한반도에서 평화는 불안정하고 통일은 요원하다. 그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 역시 자국의 이익을 우선한 정책으로 격랑의 국제정세와 함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지난 6월 3일 새 정부가 출범했으며, 산적한 대내외 전략과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의 외교·안보·통일 문제에 대한 현안과 대응 방향을 제언한다.

혼돈과 격랑의 국제정치 속에서의 대한민국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경제와 군사적 문제를 중심으로 첨단기술과 광물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2기 시대를 맞아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를 내걸고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세계를 압박하고 있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여 안보적으로는 미국에, 지리적 근접성과 경제적 관계로는 중국과 긴요한 외교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기로에 있다.

한국의 새 정부는 출범한 지 10여 일 만에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하였고, 6월 22일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6월 24일은 네덜란드에서 개최되는 NATO 정상회의에도 참석(대통령 대신 국가안보실장)하였다. 그리고 7월 8일부터는 미국과 상호 관세협상을 앞두고 있다.

세계는 지난 30여 년 동안의 탈냉전시대로부터 급격히 바뀌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극체제에서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중국의 패권세력 경쟁으로 다극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자유주의 이념과 규범이 와해되고 현실주의로 되돌아가고 있다. 한국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관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미일의 협력체제와 북한의 중국과 러시아와의 밀착으로 ‘신냉전’의 대립구도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러시아에 파병을 통해 경제 제재를 해소하고 첨단 군사기술의 지원은 물론, 향후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자동 개입을 보장받게 되었다.

새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전략 제언

미국은 외교적으로 중국을 ‘가장 위험한 적국’으로 지칭하고 있으나, 미중 패권 경쟁의 속성은 ‘경쟁과 협력’, ‘갈등과 공존’이 병존할 수밖에 없는 비선형 구조이다. 따라서 미중은 ‘공존 속에 대결하고 대결 속에서 상호의존’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주로 의존해 왔다. 그러나 21세기의 한국은 지리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경계 국가’이고, 경제적으로는 ‘중견 국가’로 진퇴양난의 입장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변화하는 국제질서를 직시하고 장차 한국이 원하는 미래상을 명확하게 정립한 후, 장기적 비전과 외교 전략의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 외교는 무엇을 하는지 보다, 어떤 국가로 보이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므로 신중한 진화가 필요한 때다.

미래의 국제질서를 진단해 보면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된 다자주의가 형성되면서 강대국 간의 거래체제가 조성될 것이다. 향후 지난 30여 년 동안처럼 한 국가가 단독으로 패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이유는 기후변화와 팬데믹, 사이버안보, 인공지능(AI) 등 국제 공공재의 소요가 중요해졌으므로 범지구적 대응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견지하고 지정학적으로 복합적 균형 위치에서 원칙 있는 동반자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한국의 외교는 새로운 질서 형성과 위기관리의 규범 형성에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견국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안보 면에서 한국은 미국 중심의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고, 국제적으로 신뢰와 역할을 확보해야 하는 다층적 안보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체성과 실용성, 동맹과 생존의 전략적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향후 한국은 한미동맹을 축으로 한국 방위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하고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북 군사 억제력을 확보하고 미래 연합사와 전작권 전환을 조기에 가시화하여 한반도 방위의 중심축을 한국 중심으로 구축해야 한다.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대비하여 조정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방위비 분담을 합리적으로 수용하여 ‘동맹의 이탈’이 아닌, ‘동맹의 재정’을 통해 자강의 공간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때다.

지금은 남북관계의 단절과 적대의 시대이다. 그러나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우려와 위협에 냉철하게 대처해야 할 때다. 북한은 신냉전의 기류에 편승하여 ‘반미 중심의 자주세력권’인 러시아와 협력을 확장하고 중국과 진영을 견고히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은 경제제재와 핵보유를 해결하고 정권을 보장받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은 대남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창하며 민족과 통일을 포기하고 영토 완정을 선언하며 남북관계를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주민과 사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대북 통일전략은 긴 호흡을 가지고 신뢰를 구축하며 남북 간에 신뢰와 관여, 억제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가장 위협이 되는 북핵에 대해서는 한미의 맞춤형 억제전략을 제도화하여 이를 능동적으로 억제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비핵안보와 경제를 택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동시에 한국 정부는 적극적인 대북 대화를 통해 억제와 관여를 동시에 추구하며,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을 신뢰 국면으로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의 최종 목적지는 공멸이 아닌 공존, 더 나아가 통일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위기를 잘 극복하여 새로운 기회의 창으로

대한민국은 혼돈과 격랑의 국제정치 속에서 외교 안보적으로는 복합 다층적으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단절 및 적대적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전략과 의도를 면밀하게 파악한 후 긴 호흡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관여와 억제를 복합적으로 작동하여 최종 목적지인 통일을 추동하는 기회의 창을 열어야 한다. 한반도의 완전한 광복은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된 모습이어야만 진정한 광복이라고 할 수 있다. 2025년 대한민국이 마주하고 있는 국내외적 위기는 어쩌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위기란 위협과 기회가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이를 잘 해결하면 기회의 창이 열리기도 하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커다란 위협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 AI 전략 추진에 관한 소고

이 태 호

(향군 논단위원,
대전대학교 연구교수)



인공지능(AI)은 오늘날 산업 혁신의 중심에 서 있다. AI 기술은 정보를 분별하여 인간의 판단을 지원하며 인간에게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산업생산성이 높이고, 물류·수송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며, 질병치료와 신약개발 그리고 국가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다. 특히 인간의 생명 중시가 강조되면서 AI의 잠재력은 국방산업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AI는 신속 정확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군사작전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있으며, 나아가 AI와 무인체계의 결합은 군사작전에 수반되는 인명피해를 줄여줌으로써 국방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국방 AI 산업 발전을 위해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구감소로 병역자원이 줄어들면서 국방 분야에서 AI 기술에 대한 관심을 크게 높이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혁신 4.0’을 통한 ‘AI 과학기술 강군’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2040년까지 AI 기반 디지털 전환 및 과학기술 강군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에는 첨단 전력의 효율적 운영과 미래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국방 인공지능발전전략(2023)을 수립하였으며, 이 전략은 ‘디지털 전환, AI 기반 전력 운용, AI 방위산업 혁신’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6대 전략과제와 30개의 핵심기술에 대한 로드맵을 구체화하였다.

국방 AI 전략 추진을 위한 기구로 2022년 12월 ‘국방 AI 센터’를 조직하여 국방 AI 전략 통합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AI 무기체계 획득 기획을 위한 전담위원회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AI 학습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인프라 확보를 위해 2021년 1월 국방부 직속으로 ‘국방 디지털전환추진단’을 출범하여 디지털 전환,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등 첨단기술의 군 적용을 총괄 조정하도록 하였으며, 2022년 7월에는 정보화기획관실을 ‘지능정보화정책관실’로 개편하여 AI 전략, 데이터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이어 2022년 11월에는 국방데이터의 생산-유통-활용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조정·감독하기 위해 ‘국방데이터관리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2024년에는 해당위원회에 AI 관련 업무를 포함하도록 기능을 확대·개편하였다. 이외에도 우리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2024년 9월 대통령 직속 공공·민간 AI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국가 AI 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 AI 전략·정책 수립 및 조정, 산업 분야 AI 확산을 위한 협력 및 기술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AI 기술을 선도하기보다는 선도국의 기술을 추격하고 있으며,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AI 전략은 기술 선도국이 추진하는 전략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선도국과의 기술격차가 좁혀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AI 정책은 선도국이 추구하는 과감한 혁신보다는 규제와 진흥이 혼합된 형태를 띠고 있으며, 국방 AI 전략은 비전 수준에서 벗어나 실행계획을 갖추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거버넌스, 기술, 검증, 전문 인력 양성과 같은 실천적 기반에서는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 또한 국방 AI 조직으로 국방데이터관리위원회는 국방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집행보다는 방향 제시와 부서 간 조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방AI센터는 현장중심 기술 개발 위주의 조직으로 전략·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업무수행에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우리의 안보환경은 점점 더 위협을 받고 있다. 북한은 전술핵을 확보한 이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한 조기경보기 생산, 5천 톤급 구축함 건조 등 재래식 무기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남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격차가 줄어드는 가운데, 인구감소로 인한 병역자원 부족 문제까지 겹치면서 우리 군은 확실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이 절실한 상황이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방 AI 전략은 다음과 같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국방 AI 정책은 규제보다는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최근 AI 기술이 국방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AI 기반 자율무기 시스템의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AI의 위험성과 윤리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AI 무기의 개발과 사용에 대한 규범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배경이다. 그러나 AI 기술이 국방에서 활용되는 영역은 정보수집 및 분석, 지휘통제 및 의사결정 지원, 무인화 및 자율 무기체계, 사이버전 및 정보전, 군수 및 물류, 교육 및 훈련 등 다양하고, 윤리적·법적 논쟁이 집중되는 분야는 AI가 표적을 식별·추적·공격하는 자율 무기체계에 국한되며, 이는 전체 국방 AI 분야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윤리적·법적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에서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개발과 실용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국방 AI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방 AI 전략의 실행문서는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2023년에 국방 AI 전략이 수립된 지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식적인 실행계획이 작성·공개되지 않은 것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내부적으로 실행계획이 마련되었으나 보안이나 기밀상의 이유로 비공개라면 다행이지만, 만약 계획 자체가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면 전략의 실효성과 이행력을 크게 저해하는 요소이다. 미국의 경우 국방 AI 전략 실행을 위한 다양한 정책 문서와 지침을 발 빠르게 제정해 전략의 방향성과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예를 들어, RAI 전략(2022), DOD 지침 3000.09, 2023 자율 무기체계 지침, 2024 국가안보 AI 정책, 대통령 행정명령 등은 모두 국방 AI 전략의 실천적 기반을 제공하는 대표적 문서들이다. 우리 군도 실행계획 수립 및 정책 문서화를 통해 국방 AI 전략의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국방 AI 전략을 수립부터 집행까지 총괄하며 관련 사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의 설치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국방 AI 정책 추진을 위해 국방부 산하에 독립사무국 형태로 ‘CDAO(Chief Digital and Artificial Intelligence Office)’를 두고 있으며, 국방 디지털 전환, 데이터 전략, AI 통합 총괄, AI·데이터·디지털 역량의 통합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국방 AI 윤리 원칙의 이행, 국방 내 AI 프로젝트의 성과 관리, 각 군 및 국방기관의 AI·데이터 관련 사업 조정과 실행력 확보,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및 인프라 예산 조정 권한 확보 등 핵심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방 AI 전략의 실행력과 지속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군도 전담 조직을 통한 국방 AI 전략을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국방 분야에서 AI 기술은 인간이 지니는 지능적, 신체적 한계를 극복시켜준다는 점에서 효용성과 그 잠재력은 매우 크다. 하지만 우리 군의 AI 기술 도입과 활용의 수준은 주요 선도국 대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으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기술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이에 우리 군은 AI 기반의 과학기술 강군 육성이라는 목표 아래, 증가하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확고한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방 AI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술개발과 현장 적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문의 : 안보전략논단 담당

☎ 02-499-0201 / korvass0201@naver.com